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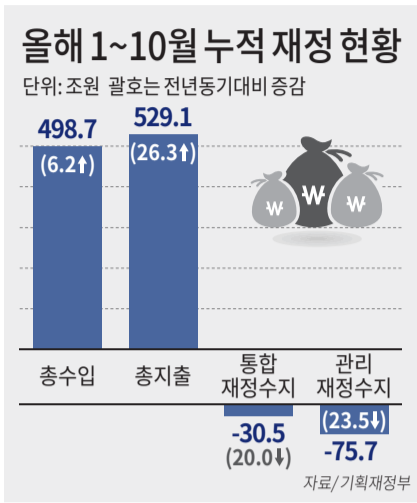
75조 재정 적자 ‘흔들리는 나라살림’ 국세감소·지출확대, 연말 91조 전망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
1~10월 누계 기준 역대 세번째 규모 법인세 18조 감소, 지출 529조 원인 국가채무 6.8조 증가한 1155.5조 국세 기반 확대·긴축재정 등 관건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5조 원에 달했다. 1~10월 누계 기준으로 역대 3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총수입은 498조7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조2000억 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81.5%로 집계됐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으로 구성된다.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1조7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6조1000억 원 증가했으나,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는 17조9000억 원 줄어든 것이 주 원인이다. 반면, 세외수입은 24조1000억 원, 기금수입은 180조9000억 원



로 각각 1조5000억 원, 16조4000억 원 증가했다.

10월까지 총지출은 529조1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80.6%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1~10월보다 23조5000억 원 증가하

며 75조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2020년(90조6000억 원), 2022년(86조3000억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달보다 6조8000억 원 증가한 115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연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인 1163조 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8000억 원이다. 올해 1~11월까지 국고채 누적 발행량은 156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에는 지출과 비교해 수입이 커 지난 9월 말 95조5000억 원 대비 개선됐다”면서도 “부가세가 1, 4, 7, 10월 나와 부가세를 건지 못하는 11월, 12월이 되면 적자폭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벼 재배면적, 서울시 1.3배만큼 줄인다

농식품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타작물 전환·고품질 쌀 생산’ 유도

정부는 쌀의 과잉생산 및 소비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벼 재배면적의 대폭 감축과 타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면적의 1.3배인 8만ha(800km²) 크기의 재배면적을 줄여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로 쌀 산업 개편에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목표를 내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및 고품질 생산 체계로의 전환 ▲신규수요 창출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 기반 확충 등이 담겼다. 대책은 내년 시작해 2029년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에 대해 생산보다 소비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 과잉 상태라며,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는 소득 증가에 따라 고품질 위주로 다양해지고 1인당 쌀 소비량은 2018년 61.0kg에서 지난해 56.4kg로 감소 추세라고 했

다. 이에 반해 쌀 농가에서 무게 중심의 생산 체계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에 정부는 쌀 산업이 더 이상 시장 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ha) 감축을 목표로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 면적 8만ha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벼 재배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선 전락작물직불제를 확대한다. 전락작물직불제 예산은 올해 1865억 원에서 2440억 원을 늘어난다. 또 하계 조사료와 밀의 경우 지급단가를 인상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효과적인 재배면적 감축 이행점검을 위해 위성사진을 활용한 재배면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 등 다양한 이행방식을 발굴해 현장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소비구조를 전환하는 방안도 본격화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푸드 열풍... 인니 MZ세대 ‘밥상 점령’

시장 확보위한 할랄 인증 과정으로 남아 롯데마트, 김밥·떡볶이 가성비 승부 두끼 떡볶이, 현지화 전략으로 대중화

“한국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고 K-푸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2012년에 처음으로 라면을 먹었고, 그 후로 떡볶이, 김밥 등 한국 음식을 즐겨 먹고 있다.”

지난달 28일 방문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부의 롯데마트 간다리아 씨티점은 한국 음식을 찾는 소비자들로 북적였다. 지하 1층에 위치한 마트 입구에는 라면, 김밥, 떡볶이, 튀김, 닭강정 등 다양한 한국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코트 매장들이 줄지어 있었다. 약 2070여 평 규모의 매장 내에서 가장 눈길을 끈 곳은 한국 라면 코너였다. 수십여 종의 라면이 진열된 모습은 K-푸드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이슬람 전통 복장인 히잡을 착용한 이마라(25·프리랜서)씨는 “한류 열풍 덕분에 MZ세대(80~90년대생) 사이에서 K-푸드는 매우 인기가 높다”며 “과거에는 한국 음식 중 할랄(이슬람법에서 허용한 음식)을 찾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할랄 음식이 많아져서 찾기 쉬워졌다. 기회가 된다면 간장계장을 먹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어를 공부 중인 스피넬라(32·프리랜서)씨는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산 딸기나 복숭아를 구하기 어려워 더 관심이 간다”며 “한국 음식은 가격이 다소 비싸 친구들과 돈을 모아 함께 나눠 먹는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친구들 역시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 김밥은 직접 만들어본 적도 있다”며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냉동상태의 봉어빵만 수입되고 있어,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부의 롯데마트 간다리아 씨티점 모습. /김대환 기자

생긴다면 길거리에서 갓 구운 봉어빵을 꼭 먹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사후르(21·바리스타)씨는 “한국인 친구와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한국 과자를 보여주곤 한다. 그럴 때마다 마트에 가서 구매한다”고 말했다. 무슬림인 그는 한식당에 갈 때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메뉴를 주문하며, 아메리카노처럼 할랄 표기가 없는 음식은 성분을 직접 확인해 돼지고기나 술이 들어 있는지 살펴본다고 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도네시아로의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은 2억1056만 500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2억318만7000달러) 대비 3.63% 증가한 737만8000달러의 상승폭을 기록한 수치다. 품목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커피조제품이 4945만5000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음료 2120만5000달러, 라면 999만1000달러, 과자류 543만2000달러, 딸기 298만4000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승훈 농수산물유통공사 자카르타 지사장은 “인도네시아에서 MZ세대

가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한다”며 “이들은 아직 소득 수준이 높지 않지만, 떡볶이, 김밥, 닭강정 등 한국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소비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롯데마트 푸드코트에서는 한국 돈으로 약 4500원을 넘지 않는 가격에 김밥, 떡볶이, 닭강정 등 길거리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반응이 매우 좋다”며 “두끼 떡볶이와 같은 프랜차이즈에서도 김밥, 떡볶이, 어묵 등을 판매하고 있어 인지도와 대중성이 높아 이런 메뉴들은 잘 팔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승훈 지사장은 인도네시아의 까다로운 할랄 인증 절차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시장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할랄 인증이라는 규제 장벽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중소 영세기업들은 2년간의 유예 기간을 통해 시간을 확보한 상태”라면서 “한국할랄인증원 등 국내 인증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KIAT, 규범준수 경영 도입 선포

‘컴플라이언스 경영 도입 선포식’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2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ISO 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기념해 ‘컴플라이언스 경영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컴플라이언스 경영이란, 준법 경영을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윤리를 실천하는 ‘규범준수 경영’을 의미한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관련 국제표준으로, 조직의 경영 정책 및 위기 대응 체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구축돼 운영하고 있는지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하는 인증제도다.

KIAT는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의 전문성과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근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은 KIAT가 전담·관리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신입직원들이 규범준수 경영방침을 공동 낭독하고, 규범준수와 윤리경영을 다짐하는 희망 메시지를 담아 희망 나무에 매다는 행사를 진행했다.

KIAT는 선포식을 계기로 규범준수 경영을 다짐하는 전직원 동참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동서발전,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준공

연간 1.3억kWh 전력 생산

한국동서발전이 대호호의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친환경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가동한다. 연간 1억3000만kWh(키로와트시) 전력을 생산, 3만8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

동서발전은 지난 11일 당진발전본부 에너지캠퍼스에서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정책관, 한현교 서산시 경제산업국장, 유휴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7.8km에 이르는 송전선로를 모두 지중화해 지역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했으며, 서산지역 경

제활성화를 위해 전체 98MW(메가와트) 중 4MW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20년간 지역주민들에게 공유한다. 발전소 제어동 건물 옥상에 전량대를 설치해 방문을 위한 지역주민 누구나 대호호 수면 위의 광활한 태양광 설비를 관람할 수 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추진한 공공기관 협업 모델이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익공유형 사업 모델로 신재생 사업확대의 모범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바다가꾸기 사업 지원, 지역농산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